

개방화시대 우리의 과제와 각오

UR이후 농업의 최대과제는 경쟁력 향상이다.
 가격과 품질, 서비스까지 포함한 농업구조의 개편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필수적인 것은 농민들의 세계적 안목, 의식의 변화와 적극성이다.

UR이후 한국농업은 지각변동적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95년부터 또는 97년, 2001년, 그리고 2004년이라는 농산물 품목마다 개방의 시기와 조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농민들의 위기 의식은 다르지 않다. 그만큼 UR협정의 영향이 전면적이고 심대하기 때문이다.

더욱 한국농업·농촌에 대한 기본가치에 쫓아 장단기 농정의 방향과 계획을 수립해야 할 책임 당국조차 뚜렷한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이해 당사자인 농민도 대부분은 UR협정이 농업·농촌에 미치게 될 파급영향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하는 과거적인 안이한 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이다. 농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농촌·농민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막연한 실정이다. 다만 우리농산물을 애용해야 한다는 수준일뿐 농업·농촌의 지속적 발전에 국민경제, 소비자



황 민 영

한국농어민신문 주필

인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알지 않는다. 오히려 UR타결에 의한 농산물 수입이 도시소비자에게는 편의와 실리를 제공할 것이란 생각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UR의 본질에 대한 기본인식이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하며, 농업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UR이후 전개될 농산물 수입, 이로 인한 국내농업, 농촌에 미칠 영향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없다.

1.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

1992년 현재 총GNP중의 농

림수산업의 비중이 7.8%인데,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오는 2001년에는 2.8%까지 격감이 예상되고 농가인구의 비중도 1992년 13.1%에서 2001년에는 5.1%, 그리고 농림수산물의 무역적자는 92년 42억6천만불에서 2001년에는 130억 3천만불까지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개별 농산물로는 개방이 시작되는 1995년 이후 생산감소와 함께 가격하락, 가격불안정이 반복되면서 농업수익성 저하와 농업소득의 급격한 감소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농산물시장에 대한 수입농산물의 시장지배·잠식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식량자급률이 저하되고 특히 개방조건이 매우 불리한 쇠고기, 감귤류 등은 그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개별농민들은 개방폭이 적고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으로 작목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생산과잉, 생산부족의 반복현상이 빈번하여 가격불안정에 의한 농가피해는 더욱 심화되고 생산기반의 와해는 확산될 것이다.

이에 따른 농지의 휴경, 전용,

또는 폐경지의 확대가 지속되면서 농산물 자급률은 급속히 하락하고, 농촌인구의 이농현상이 심화되어 기본적인 영농담당세력마저 확보하지 못할 위기가 올 것이다.

전면적인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외국 농산물이 수입되면 농업생산기반 붕괴, 농가인구감소, 식량자급률 하락, 농가경제 악화 등으로 인하여 농업, 농촌이 단순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또는 장소로써 기능이 상실될 때 사회공익적 기능은 차치하고라도 비농업부문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것이다.

이농인구의 도시유입으로 인구 과밀에 의한 교통, 주택, 교육, 환경, 범죄등 도시문제의 심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최근 낙동강 수계의 오염현상은 단순히 사람의 의식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요, 바로 지역균형, 농업·농촌이 올바르게 발전하지 못한데서 비롯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결국 농업이 몰락하고 농촌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식량자급, 식량안보의 위기가 초래되고 국제수지 악화로 공업부문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지속적으

로 도모할 수 없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2. 농업정책의 기본목표

농업의 기본적 가치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의 보장이다. 국민식량을 자급하지 못하고는 국가는 자주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후까지 생각하는 식량자급도를 주식인 쌀은 100% 자급률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전체적으로는 70% 이상은 지켜져야 한다.

이 식량자급도의 제고,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생산력의 획기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업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농업생산의 기본은 농지이다. 우수한 농지의 확보는 농정의 기본이다. 식량자급목표에 알맞는 절대농지를 확보, 보전하고 경지정리, 관개시설등을 포함한 종합적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민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정부의 농지정책은 원칙이 결여된 것으로서 농정의 기본목표를 의심케 한다. 농업진흥지역을 축소 조정했다거나 농지규모확대, 농지거래규제 완화의 차원에서 농민이외의

사람에게 농지소유를 자유화하고 규모제한도 철폐하며 더욱 기업화라는 미명하에 무원칙한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은 긍정적 영향보다 농업발전에 폐해로 작용하게 될것이 예상된다.

이제 농업정책의 주요변수는 농민이 되었다. 그것은 농업담당자의 절대부족에서 비롯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농민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농민을 위한다기 보다 농업생산력의 지속적 발전, 농업·농촌의 사회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안정적 농가소득의 유지발전은 지속적 생산성 확보, 농산물 가격(생산비 보장)의 안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알맞게 농업구조개혁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물론 농가소득은 지금까지 농업소득 의존구조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소득원의 개발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농민들의 의식전환, 주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국가가 농업, 농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농민에 대한 사회보장 연금, 재해보상 및 보험, 의료혜택, 공공문화시설의

확충 등 국민적 수준의 농어민 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가 42조원의 농어촌투자,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에 의한 15조, 10년투자 계획은 획기적 조치로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자금의 규모보다 투자의 내용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대부분 농정이 그렇듯이 농업과 농민의 발전을 위한 투자가 되지 못하면 농가에게는 부채로 남고 농업은 제구실을 하지 못함으로써 국가도 원하지 않는 사태로 비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3. 농업구조 개선의 방향

UR이후 농업의 최대과제는 경쟁력 향상이다. 가격과 품질을 포괄하고 서비스까지도 생각하는 농업구조의 개편이 시급하다. 제한적 농지규모이지만 어떻게 규모화할 것인가를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무리 자본, 기술, 토지 집약형 농업형태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농지규모의 확대, 경영의 합리화는 장기적 필수과제이다.

생산기반 조건인 경지정리, 관계시설의 확립은 기계화, 기술농업의 선행조건이다. 이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농업의 백년대계

를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자재산업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UR특위 위원들이 농촌현장체험을 통하여 앞으로 농업발전은 협업단지, 협업체 육성을 통한 것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UR이후 농업구조개편 방향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기업농적 발상만이 비등하는 분위기를 불식하고, 품목별로 효율적인 협업적 농업경영체를 육성해야 하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업적 가족농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다양한 농업생산조직을 법인화하여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이는 농업의 전문화, 기업화의 필요조건이고 생산·가공·판매의 일관생산체제를 지향하는데 기초조건이다.

이를 위한 현재의 생산자조직인 협동조합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생산자 협동조합은 영세소농이 생산을 합리화하고 구매·판매·이용·가공을 통하여 독점자본, 유통·상인자본의 횡포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것이 기본목적이다. 그중에서도 생산의 협동화

이다. 생산협동의 토대가 튼튼해야 구매·판매의 협동적 수행이 용이하고 이용·가공도 가능하다. 생산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은 이에 부수적 기능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조합원 자신이 신용자본을 극복하지 못하고 신용자본의 노예로 전락하고만 셈이다.

협동조합의 농업·농민적 개혁 없이 농업·농촌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업구조개편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다음은 농정조직의 개편이다.

현재의 농업행정, 농촌지도로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의 변화무쌍한 무한경쟁의 농업, 농촌, 농민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 현재 군·시·동·면, 농촌지도소와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그리고 각종 협동조합, 협회로 다기화, 중첩되어 있는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행정, 지도, 지원제도의 통합, 조정, 폐지를 통한 전문화, 선진화, 효율화가 이뤄져야 한다.

95년에는 그동안 미뤄오던 지방자치체의 전면적 실시가 이뤄질 계획이다. 참으로 민주화, 지방화가 이처럼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절절하다. 지방화의 지연은 민주화의 지연이요, 국제

화 시대에 뒤떨어지게 한 정치의 후진성의 한 표본이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방자치제는 농업농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서울중심, 중앙중심, 도시중심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는 농업·농촌의 발전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해야 할 과업중의 핵심과제이다.

지금까지 정치는 중앙 인물, 심지어 지역당 중심으로 움직여짐으로 인하여 지방의 문제, 대중의 문제, 농촌의 문제가 항상 소외되고 희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화시대, 농산물시장이 전면개방되는 시기에 농업, 농민문제는 국가·국민적 차원에서 농업, 농촌살리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구체적 실천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제, 지역주민, 생산주체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체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의 자주·자립적 발전없이는 국토, 산업,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우리의 각오

전 세계 무역의 자유화라는 기

치아래 전개되고 있는 UR, 그리고 그 이후 예상되는 그린라운드 (GR)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총동원되고, 강대국 위주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특히 이익의 화신인 다국적 기업의 무차별한 공격이 보다 강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그 전형이 미국이다. 남북이 분단된 특수 상황에서 정치·경제·안보면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비극의 씨」를 원천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UR협상에서 최대의 피해자가 한국일 수 있고 그중에서 가장 피해가 큰 계층이 농민이요, 농업인 현실이다.

UR의 재협상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는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우리의 농업 농민을 어떻게 해야 하고, 할 것인가는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 분명히 해야 할 주체는 농민이다. 농민들이 앞장서 농업·농촌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나서야 한다. 정부가 할 일, 도시소비자가 할 일, 관료·정치가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또는 그들이 할 일을 하도록 하는 것 또한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이 보다 적극성을 갖고 나서야 한다.

개방화시대 한국농업이 국제 경



농업·농촌문제 해결의 주체는 농민이다. 농민들이 보다 적극성을 갖고 나서야 한다.

쟁력을 갖는 산업으로 성장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상,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전근대적 사고로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할 수 없고 농업의 존립이 위태롭다. 농업이 없는 농촌, 농민이 존립할 수 없는 농업은 어느 누구도 바라서도 안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 매시는 사람이 하는 일만큼 농민들의 세계적 안목을 키우는 일이 필요하다. 농민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고는 개방화 시대 한국 농업의 국제화 시대를 열어나갈 수 없다. **농약정보**